

신안에서 국내 첫 민간 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가동

전남 재생에너지시대 본격 시작
정부 아닌 순수 민간자본으로 추진
SK이노베이션 E&S·덴마크 CIP
8700억 투입 96MW급 발전단지
연간 25GW 규모의 전력 생산

전남에서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해상풍력이 가동에 들어갔다.

과거 한국전력 등 정부가 주도했던 것과 달리 순수 민간자본으로 추진된 해상풍력인 데다 주민참여형 사업라는 점에서 전남의 재생에너지시대가 본격화 됐다는 평가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신안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SK E&S 전남 해상풍력 1단지(96MW) 준공식'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 토마스 위버 폴슨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정부·지자체·유관기관·발전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 토마스 위버 폴슨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정부·지자체·유관기관·발전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기업인 'CIP'가 8700억 원을 투입, 조성한 96MW(메가와트)급 발전단지다. 10MW급 터빈 10대가 설치돼, 연간 25GW(기가와트) 기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로부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후속 인허가 절차를 밟아 지난 5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초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사업을 성공시킨 사례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군(軍) 작전성 협의와 주



11일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SK E&S 전남 해상풍력 1단지(96MW) 준공식'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해상풍력단지의 준공을 축하하는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해상풍력 1단지 내 10MW급 터빈.

민수용성 등 다양한 규제와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탓에 민간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민관(정부·지자체·사업자) 협력으로 완료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전력 판매금액의 일부를 신안군 디딤면 주민과 공유한다. 이번 사업은 건설 과정에서 신안과 목포 등 지

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SK이노베이션 E&S와 CIP는 399MW 규모의 전남해상풍력 2·3단지도 조성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량 35.6GW 중 22.2GW(62.4%)를 보유하고 있다. 올 4월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인 3.2GW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진도 맹골도

인근 해역 3.6GW 규모 발전단지도 집적화단지로의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전남도는 오는 2035년까지 전남 서남해안에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자재 생산, 설치, 운송, 유지보수 등 전과정을 아우르는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LS그룹이 해남 화원단지에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 투자협약을 하는 등 민간투자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민간 주도 최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며 겪었을 여러 규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업운전을 성공한 발전사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신안에서 추진 중인 햅빛·바람연금을 확대해 도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년 '광주 탈출' 러시... 특·광역시 중 유출 '최악'

지난 5월 광주시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140만명 선이 붕괴되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단순한 총인구 감소보다 심각한 대목은 '청년 증(2030세대)'의 이탈이 겹칠 수 없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 청년인구 유출이 줄고 있거나 여전히 유입보다 유출이 많다.

광주연구원이 최근 광주시에 제출한 '광주시 인구영향평가 설계 및 시범 실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청년 인구(19~39세)는 2015년 이후 매년

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6387명이 광주를 등진 데 이어 2024년에도 6005명이 순유출되며 2년 연속 6000명대 이탈이라는 구조적 고착화 단계에 진입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전체 인구 순유출이 8930명에 달해 연말까지 청년 유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의 청년 유출도 여전하다. 전남도의 청년(19~45세) 순유출인구는 지난 2020년 1만3150명

→2021년 1만382명→2022년 7121명→2023년 5619명→2024년 6546명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입보다 유출이 많다. 올해 10월까지도 4418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광주 청년 유출은 타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더 드러진다.

2024년 기준 광주의 청년(20~39세) 인구 순이동률은 -1.63%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울산(-0.47%)과 비교하면 광주의 청년 유출률은 3.5배 가량 높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부산(-1.13%)과 대구(-1.03%) 조차 광주보다는 양호하다.

이는 광주가 호남권 거점 도시로서의 인구 흡수

2024년 청년 순유출 6005명

부산·대구보다 심각한 수준

절반 가까이 "일자리 찾아 떠나"

전남도 유입보다 유출 많아

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시급

력을 상실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찾아 떠나야 하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 청년들의 이탈 이유는 '일자리'다. 광주연구원 분석 결과 청년층의 전출 사유 중 '직업(취업·이직 등)'이 46.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지역 내에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광주를 떠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이동한 청년은 총 1만3011명으로 전체 전출의 38%를 차지했다.

반면 수도권에서 광주로 유입된 청년은 8030명

에 그쳐, 수도권과의 교류에서만 5000여명 가까운 순유출이 발생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2030년 140만2800명, 2040년 131만8500명을 거쳐 2050년에는 120만7400명 수준까지 조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25년 70.9%에서 2052년 52.5%로 급감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17.9%에서 38.8%로 두 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만 늘어나는 '인구 절벽'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광주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출산 지원금을 늘리는 식의 단편적 처방으로는 구조화된 인구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인구 관점을 반영하고,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검증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콘테스트 전국 1위

고흥전통시장

전국 유일 숯불생선구이 특화시장

해풍으로 말린 생선을 대나무숯에 노릇하게 굽고
참기름으로 향을 더해 고소함을 완성한
고흥의 대표 맛

고흥전통시장이 전하는 신뢰와 품질

대형버스 주차장 완비 · 단체손님 식사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고흥군 | 고흥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